

양도세 감면 지방엔 毒

수도권 차익 기대로 지방자금까지 쏠림 현상 취·등록세 감면 확대 등 지방 배려 대책 나와야

정부가 2·12 세제 개편에 따라 내놓은 양도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이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거래에는 도리어 '독(毒)'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감면 폭을 확대해서 '투자해도 될 곳'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등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본보 2월 13일자 1·3면 보도) 지방을 비롯,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속하는 주택(미분양 아파트 포함)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특히 동두천·안산·평택·김포·이

천·용인 등 수도권 지역이 지방과 동일하게 양도세 한시(5년) 전액 면제 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수원·성남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게 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기대 효과에 들쭉이고 있다.

그러나 면제 조건이 지방과 수도권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도세 면제는 '양도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의지를 자극해 부동산 거래를 살려보자는 정책이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방보다는 가격 상승 여지가 높은 수도권 신규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한 실정을 외면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국 미분양 물량 16만2천 570가구 가운데 지방 미분양이 84%

(13만6천704가구)에 이르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은행 금리가 낮고 금융 시장 불안으로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 힘든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방의 '수도권 원정 투자'가능성마저 높아 정부 정책이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양도세 면제'가 지난 외환 위기 때 도입된 뒤 광주·전남지역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릴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스피드뱅크 정여희 호남지사장은 "지방 주택 시장은 분양가보다 실제 거래가가 떨어져 양도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지방투자자들이 양도 차익을 노리고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역현상마저 우려된다"며 "취득·등록세 감면 폭을 확대해서 지방이 투자할 만한 곳이라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검은 천으로 덮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부지 내 도청별관. 공대위가 옛 도청 별관 철거에 동의한다면 사진 맨 왼쪽의 옛 도청민원실과 중앙 3층 건물인 본관을 살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재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청별관 '검은 옷' 입힌 까닭은?

공대위 "위치 알리기 위한 것" 표명 속 별관 철거 수용 위한 수순밟기 가능성

옛 전남도청 문화전당 부지 내 도청 별관 철거는란으로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 단체가 별관을 검은 천으로 덮어 역현상마저 우려된다"며 "취득·등록세 감면 폭을 확대해서 지방이 투자할 만한 곳이라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항쟁 3단체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4일 별관 전체를 검은 천으로 덮었다. 천막 상

단에는 '이곳을 철거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공대위는 "별관 보존을 위해 8개월 동안 투쟁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별관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있어 검은 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은 천 설치 5·18 당시 별관을 포함해 도청 일원에서 항거하다 숨진 시민군 14명의 넋을 기리는 뜻도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청별관 철거를 받아들이기로 한 공대위가 '별관 철거수용'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별관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천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때늦은 감이 있는 데다 투쟁을 주도해 온 일부 5·18 단체가 '철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별관 철거 수용에 앞서 당시 도청 일원에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의 모임인 5·18유족회원들을 위로하고 설득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족회 등 5월 단체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철거 수용 여부에 따른 막바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유족회 등의 의견을 최종 종합해 입장을 밝힌다는 복안이다.

안성욱 공대위 대외협력국장은 "검은 천 설치 3개월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항으로, 이를 별관 철거수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측이다"며 "공대위가 별관철거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는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초·중·고 학업성취도

교육청별 첫 공개

3등급으로 나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16일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된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교육청별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화 논란 등 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

광주·전남 24곳 등

교과부 오늘 발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고 1학년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되며, 광주·전남지역은 시·도 교육청과 광주 2개, 전남 22개 등 24개 지역 교육청이 공개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우수화력(80% 이상) ▲보통화력(80% 미만~50% 이상) ▲기초화력(50% 미만~20% 이상) ▲기초화력 미달(20% 미만) 등 4등급이지만, 서울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통화력 이상 ▲기초화력 ▲기

초화력 미달 등 3등급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3등급 공개 역시 학교 간·지역간 학력차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서울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0월 국가 교육과정의 제공하는 학업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졌다. 올해에도 오는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함께 성취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성미가 부활했다

LPGA 개막전 준우승

▶ 관련기사 19면



北미사일 요격 작전통제소 軍, 2012년까지 구축키로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임무를 전담할 작전통제소를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5면》

사실상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인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15일 "2006년부터 '탄도유도탄(미사일)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천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전통제소는 평시 북한의 미사일 시찰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미사일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부대에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는 장소를 전달하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이 탐지, 요격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스커드-B.C(사정 300~500km)와 노동미사일(사정 1천km) 등이다.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사정 4천300~6천km)도 탐지해 이지스 구축함 등에 요격 지시를 하달하게 된다.

요격은 패트리어트 방공부대에서 주로 맡게 되는 데, 공군은 작전 하순 목표에서 1개 대대(20여기)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1개 대대 규모를 추가 들여올 계획이다.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초속 1.6~2km이며, 노동미사일은 초속 3km에 이른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서울까지 2분10초에서 2분30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 경찰청장

강희락씨 내정

'용산 사망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후임에 강희락(56) 현 해양경찰청장이 내정돼 경찰위원회에 통보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강 청장을 후임 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면서 "공식적인 내정 발표는 16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의 논의

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26회를 거쳐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찰청 홍보관,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